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문진영 경제안보전략실 글로벌전략팀 연구위원
jymoon@kiep.go.kr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syoon@kiep.go.kr

박지원 경제안보전략실 글로벌전략팀 부연구위원
jiwonpark@kiep.go.kr

나승권 경제안보전략실 글로벌전략팀 선임연구원
skna@kiep.go.kr

이성희 경제안보전략실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주요국은 ESG 정보 공시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 체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ESG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 공시 기준 통합 및 표준화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ESG 정보 품질 개선 △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등이 있음.
- ▶ [ESG 공급망 실사]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의 실사 대상 포함여부, 중소기업의 실사 의무 부담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 [주요국 기업 ESG 점수 비교] 무디스(Moody's)와 레피니티브(Refinitiv)의 18개국 기업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ESG 대응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규모나 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 [ESG 평가와 고용 및 생산성] ESG 평가 점수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에 따르면 (1)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2) 환경 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3) 환경 점수와 사회 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
-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 민간 ESG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공급망 실사 관련 기업지원 확대 및 통상협상 대응 △ ESG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소통 및 지원 활동 강화 △ 중소기업 대상의 ESG 지원 활동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및 기관에서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
 - ESG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성장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하는 용어로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초기 ESG는 경영의 관점에서 강조되었으나, 최근의 추세는 ESG 관련 보고 의무 및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정보공개 차원에서 ESG가 특히 강조되고, 주요 경제활동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ESG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EU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과 국내 대응을 분석
 - 전 세계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기존 국내 문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실증 분석을 수행
 -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서 시사점을 제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① 주요국의 ESG 정책

- 주요국의 ESG 제도와 정책은 △ 기업이나 투자자의 공시제도 △ 투자결정에 ESG 통합 △ 금융상품 관련 제도 △ 지속가능 금융 전략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분류체계(Taxonomy) 등이 있음.
- EU와 미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무 공시 기업을 확대하거나,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대상 기업과 보

고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검증을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할 계획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관한 분류체계의 일환으로 감축과 적응 관련 활동 범주를 우선적으로 발표함.

- 최근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ESG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조치에도 주목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공시 규정과 공시 지침을 연이어 도입 중임.

- 중국정부와 주요 지역 증권거래소는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통해 ESG 생태계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4년 '스튜어디십 코드'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ESG 확산 기반을 구축함.

- 인도와 동남아 주요국(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모든 상장사 또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상장사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2021년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분류체계를 발표함.

② ESG 논의의 쟁점

●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ESG 정보 공시에 관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재무정보 또는 ESG 정보에 관한 국제 공시기준이 필요함.

-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다양한 공시기준 및 이니셔티브를 통합 및 보완한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표준은 기업의 정보 생산 부담은 낮추고 기업간 ESG 성과 비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경영과 정보 공시 기초가 확산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ESG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내·외부적 노력이 요구됨.

- ESG 경영이 중소기업에 신규 투자기회나 경영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ESG 도입에 필요한 자원(인력, 자금, 정보 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기구, 정부, 대기업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 중임.

● [ESG 정보의 품질 개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이 ESG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은 정확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정보를 생산·보고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표준화된 정보보고 지침과 정보 검증을 통해 ESG 정보 품질을 제고해야 함.

●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개념적 특성과 정량화 가능 여부로 인해 환경(E)이나 지배구조(G)에 비해 사회적 영향(S)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부족한바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

2) ESG 공급망 실사 논의와 쟁점

① ESG 공급망 실사 국제 논의 현황

-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UN 인권이사회의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구의 논의는 주요 공급망 실사 제도의 기초가 되었음.
-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이에 기초하여 자국 내 공급망 실사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아동노동 및 근로자 착취와 같은 인권과 환경 측면에서의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들의 공급망 실사 법령 도입 사례로는 2015년 제정된 영국의 「현대노예방지법」, 프랑스의 「인권 실사 의무화법」, 노르웨이의 「투명성법」,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등을 들 수 있음.

② ESG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 [실사대상 분야] 실사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항은 기후변화와 지배구조를 공급망 실사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 여부임.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에는 기후변화를 실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사 의무의 명확화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실사대상 기업의 범위] 실사대상 공급망 범위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 부과 여부와 함께 실사대상인 공급망을 협력업체 중 어느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임.
 - 2022년 발표된 집행위원회 초안에서는 대기업과 위험 산업군의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포함하였으나, 2021년 유럽의회 결의안 등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또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더라도 실사대상 공급망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EU 회원국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및 국가 간 규제 편차] 최근 국가 혹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규정 준수 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③ 국내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 국제사회 공급망 실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기업 공시부담 경감, 비상장법인 교육지원 강화 등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의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사회 공급망 실사 의무 강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유의미한 정책 분야임.

3) 주요국 기업 ESG 점수 비교

① 주요국 기업의 무디스(Moody's) ESG 점수 비교

- 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미국 등 18개 52만 4,051개 기업의 ESG 점수를 비교·분석
 - 무디스 ESG 점수는 자체 모형을 통해 데이터가 부족한 비상장 및 중소기업의 ESG 점수를 예측(predict)하여 결측치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결측치가 매우 적은 편임.
 - 분석 범위를 자산규모 혹은 매출이 천만 달러 이상이고 마지막 관측 연도가 2020년 이후인 법인으로 제한하였으며, 국내 기업은 4만 3,607개로 상장기업과 외감기업을 대부분 포함
- 단순 평균으로 비교 시,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의 평균은 11.50점으로 18개국 평균(20.66점) 하회
 - 무디스 ESG 총점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7점), 인도(27점), 아르헨티나(27점), 캐나다(27점)였으며, 스위스,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 및 호주도 평균을 상회하거나 평균 수준의 ESG 점수를 보임.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ESG 점수가 평균을 하회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주변국인 일본(17점)과 중국(17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짐.
 - E, S, G 영역별 점수에서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G 영역에서 평균의 절반 이하로 저조한 성적을 보임.

② 기업 특성을 고려한 ESG 점수 비교

- ESG 점수는 기업의 업력, 규모, 산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 뒤 ESG 점수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기업이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ESG 점수는 기업의 업력, 자산·매출 규모, 산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별로 기업의 구성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점수를 비교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

-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상장 여부, 기업 업력과 제공항, 자산의 로그값, 총자산 이익률, 레버리지, 자본집약도, 잉여현금흐름, 예측 점수 여부 및 산업 고정효과를 포함한 뒤 국가 고정효과로 한국과의 차이를 추정함.
- 기업 규모 및 산업 등의 특성을 통제한 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국가 고정효과의 크기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기업의 특성별로 국가간 ESG 점수가 상이함.
 -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 전반적으로 ESG 점수가 높았으며, 국가간 ESG 점수 차이도 상장기업에 서 더 크게 나타남.
 - 예측 점수가 아닌 실제 점수를 가진 기업(기업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하면 순위가 약간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으며 G 점수는 여전히 최하위에 위치
- ③ 레피니티브(Refinitiv) 점수를 이용한 강건성 검사
- 무디스 ESG 점수는 실제 점수보다 예측 점수가 훨씬 많고,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비상장기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다른 ESG 점수를 이용한 강건성 검사를 실시함.
 - 레피니티브는 18개국의 상장기업 8,174개에 대한 ESG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3,375개로 가장 많고 국내 기업은 162개로 대부분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이거나 금융업종이었음.
 - 레피니티브와 무디스 모두에게 평가를 받는 6,071개 기업의 평균을 단순 비교한 결과, 무디스 점수는 중국과 함께 국내 기업이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레피니티브 점수는 18개국 평균에 위치함.
 - 두 평가사 모두 프랑스 기업의 ESG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인도,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높은 점수를 보임.
-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평균을 추정하면, 레피니티브 점수도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국내 기업보다 평균이 낮았던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미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높아짐.
 - 이는 레피니티브 평가 대상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초대기업 비중이 높아 ESG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편이었음을 시사함.
 - E 점수에서는 중국과 미국 다음, S 점수는 중국 다음, G 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함.
 - 30대 기업 계열사 및 금융업종이 대부분인 레피니티브 평가 대상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비교할 때도 ESG 평가가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나라 ESG 위기 관리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4)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①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 분포 특징

-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ESG 성과 및 개별 등급 분포를 서스틴베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 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평가 대상기업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21년 기준으로 총 1,005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장 높은 AA등급 기업들은 2022년 상반기 기준 9.8%를 차지하며, 중간인 B등급이 16.1%, 가장 낮은 E등급은 1.5%,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기업들이 BB등급(29.1%)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
- 원점수 기준으로 표시된 ESG 점수 분포에 따르면 2015년을 제외하고 60점 이상의 중고득점 기업 수가 그 이하 중저득점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2015년의 경우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 속한 기업 수가 이후 연도에 비해 많이 적어 전체 표본 수에서 차이가 나며, 2015년과 그 이후의 분포 모양 차이는 여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분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상위권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하위 영역별 분포는, 지배구조(G)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좌우 대칭의 정규분포에 근접한 반면 환경(E)과 사회(S) 부문은 분포의 왼쪽이 매우 두터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며, 특히 환경 부문은 최하위권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특징을 보임.

② ESG 점수와 고용 및 생산성의 관계

- ESG 평가와 기업의 생산성 사이에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 및 종합점수(ESG)와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ESG 평가가 높을수록 기업 단위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기업의 규모나 매출, 피고용인 수, 업력 등의 주요 특성을 통제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패널 회귀분석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1)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2) 환경 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3) 환경 점수와 사회 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음.

- 종합 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ESG 평가 점수 개선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움을 시사함.
 - 오히려 ESG 활동이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된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를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3. 정책 제언

1) 민간 ESG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정부나 규제 당국의 역할은 ESG 정보 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의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류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을 지속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수출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ESG 공시나 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업의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할 필요도 있음.
 - 산업재해, 노사관계, 환경,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법규를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들이 생산 및 영업, 고용 활동을 할 때 이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공급망 실사 관련 기업지원 확대 및 통상협상 대응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비롯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규제 관련 동향 및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공급망 실사제도의 대부분이 자국 국적의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전개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외 기업들

의 경우도 공급망 실사의무 수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논의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급망 실사 지원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음.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외에 현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도입한 인권 실사 법령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업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 정비 및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ESG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소통 및 지원 활동 강화

- 국가별 ESG 점수 차이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보다도 국가 정책이나 ESG 이해 등 전 국가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국내적으로 중소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부의 ESG 지원 노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기업에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점검
 - 국내 기업들이 ESG 점수 총점에서도 낮고,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글로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 내에서 자생적으로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 대상의 ESG 지원 활동 강화

- ESG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내 자원이 풍부한 상장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기업 입장에서 이 들 중소기업에서의 ESG 활동 여부가 EU의 공급망 실사에서처럼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음.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KIEP**